

# 은행권 강타 채용비리 수사, 행장 등 38명 재판에

## 대검 반부패부, 수사결과 발표

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2명 구속·26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은행장 4명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 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별로는 성세환(66)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 됐다. 3명이 구속기소 된 부산은행이 기소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



KB금융그룹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사.



우리은행 본점.

해)를 받는다.

송씨는 전 부산은행 수석부행장 정모(62)씨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은 뒤, 성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5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은행 경영지원 본부장인 박모(55)씨 등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은행도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하나은행도 2명이 구속기소 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함영주(61) 은행장도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광구(60)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역시 채용비리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됐다.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은

윤중규 은행장이 기소를 피했다. 대신 이모(59)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윤 은행장이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과 서모(52) 전 부행장 등 4명도 광주지검이 재판에 넘겼다. 양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서울 북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벌였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병중 기자 joker@metrosoou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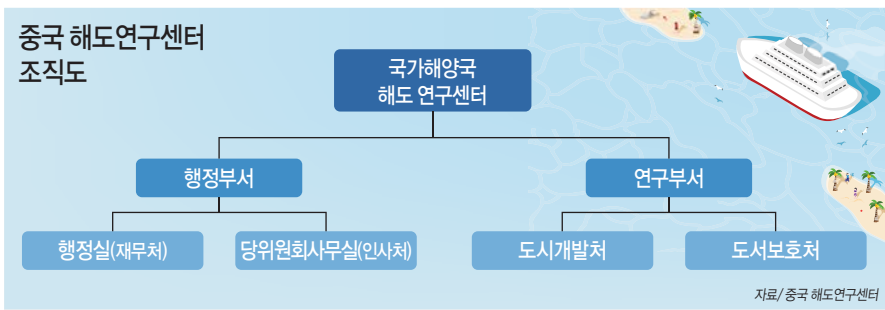
# 도서관 수요 급증... 섬 전담기관 설립해야

## 섬 담당 부처에 업무 각각 분산 중 처럼 정책지원 뒷받침 돼야

최근 섬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난 등 섬과 관련된 정책 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연구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섬에 대한 제도 정비와 강화하는 중국처럼 섬의 관리 및 활용정책 개발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섬은 해양권의 보화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공간이고, 해양생태·해양관광 등 해양을 이용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섬은 육지와 고립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크고, 다양한 역사, 문화적 스토리를 갖고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 287개,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서 472개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의 해안선 길이는 7210.3km로 이 중 자연해안선의 비율은 84.7%를 차지하며,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2개소 중 11개소는 섬과 주변해역으로 해양생태계가 우수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최근 해양관광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도서관에 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지난 10년(2007~2016년)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일반인이 30% 증가했고, 2016년 기준 연안여객선 이용객 1542만명 중 일반인이 7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관개발계획·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남의 ‘찾아가고 싶은 섬’과 ‘명품섬 베스트 10’, 전남의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 경남의 ‘테마가 있는 관광 섬 개발’ 사업 등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최근 섬에 관한 정책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섬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섬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섬 담당 부처에 업무가 각각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인도서 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유인도서 업무를 시행 중이다. 또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등 섬에 대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어 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 해양갈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13년 국가해양국 산하에 해도연구센터를 설립했다. 해도연구센터는 섬 개발과 보호 등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 정부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연안재해 예방, 섬 문화 연구 및 홍보, 국제협력 촉진 등을 수행하는 섬에 관한 종합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법무부 ‘화상공증 제도’ 20일 시행

## ‘공증인법시행령’ 개정령 19일 공포 각서 등 2010년 분 부터 공증 가능

#. 미국 알래스카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C씨는 한국 내 토지 매도를 위해 한국에 사는 조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 위임장을 만들었다. 그는 전자공증시스템 위임장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넣어 화상공증을 신청했다. 이전에는 직접 재외공관을 찾아 영사의 인증을 받아 한국에 우편을 보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 있는 공증인과 화상대면 후 인증을 받아 조카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매매계약 상대방도 위임장의 유효 여부를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20일 시행된다고 17일 법무부가 밝혔다.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 예정이다.

위임장과 각서, 계약서 등 전자문서 파일은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공증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증

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 도입을 담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법무부는 그 후속조치로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을 개발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언제 어디서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병중 기자

# 노동부 ‘사망 사고’ 포스코건설 특별감독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 사고를 유발한 포스코건설사의 본사 및 소속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1개월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사는 지난 3월 2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붕괴돼 공사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함께 추락해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총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

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안전경영 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일본취업 청년 5년간 1만명 지원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청년들의 일본 취업 지원을 위한 이음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일본 취업 1만명 지원을 목표로 구인기업 발굴, 구직자 양성, 매칭 지원, 사후관리 등 취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주일대사관과 공동으로 해외 취업연수과정인 K-Move 스쿨 일본 과정을 올해 1320명에서 2019년 1500명 수

준까지 확대하고, 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월 2회), 정보 박람회(12월) 등도 일본특화로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간 대학의 수업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여건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구인처와 구직자간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6월에 Career in Japan, 11월에 일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재외공관의 구인공고도 월드잡플러스에 등록해 정보

제공과 알선 창구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해 월드잡플러스 내 채용기 데이터베이스(DB)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국내 취업정보망인 워크넷과도 연계한다.

현직 정착 지원을 위한 정착지원금과 지급기간을 확대(취업 1개월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해 취업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노동·외교부, 이음프로젝트 추진  
K-Move 스쿨 내년 1500명 확대